



“quarterly 청렴” <2016년 제1호 1/4분기>

2016. 4. 11.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청렴韓 길로(路)

간추린 청렴소식

1 청렴서약 및 청렴실천 결의('16.2.4)

▶ 전 직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여 Clean 수원국토 구현에 동참하고자 청렴서약 및 청렴실천 결의를 다짐하였습니다.



2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홍보('16.2.1~)

▶ 관내 국도 전광판(VMS)과 하천관리사무소에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신고'에 대한 범국가적 대국민 홍보에 동참하였습니다.



3 운행제한차량 합동단속 실시('16.3.21~24)

▶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 확립, 도로파손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운행제한 차량 합동단속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해외 청렴 사례 소개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를 성문화한 나라 스웨덴

철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 1766년 「출판언론자유법」 제정을 시초로 '행정의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21세기 세계 70여개국에 전파

- 의회·행정·사법 자료 뿐 아니라 공직자의 이메일 등도 '공식 기록'으로 규정하여 시민청구 시 공개

- 자의적 비공개 남발을 막기 위해 1982년 「기밀보호법」을 제정, 명확하게 기밀로 규정된 사항 외에는 빠짐없이 공개

공직비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무관용

● 뇌물을 주기로 약속만 해도 이메일 등 증거가 있으면 범죄로 기소할 수 있음

● 비리에 연루되거나 뇌물을 주고 받은 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 처벌이 강화됨

관련 사례

● 전 스웨덴 부총리 '모나 살린'은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조카에게 줄 기저귀와 초콜릿, 식료품 등 생필품 2000크로나(약 34만원)어치를 공공카드로 구입한 사실이 정보공개 과정에서 밝혀졌음. 그는 이후 자기 돈으로 카드대금을 메워 넣었음을 항변하였으나, '정부와 국민의 돈과 개인 돈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강한 질타로 결국 부총리직에서 낙마함.

행동강령 Q & A

Q&A 금전의 차용 금지

Q 직무관련자인 친구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면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인지?

A 비록 친구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이자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행동강령 위반임.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금전을 차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Q&A 금품 등 수수 금지

Q 승진을 이유로 직무관련이 없는 친구로부터 축하화환 등을 받을 수 있는지?

A 직무관련이 없는 사람으로부터는 받을 수 있으나 화환은 금지된 금품에 해당되므로 직무관련자(공무원)로부터 받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 축하전화, 축전을 받는 것은 가능함

김영란법 바로 알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 청탁금지법 제정의의

- 부정청탁 행위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차단
- 직무관련성, 대가성 등이 없어도 제재 가능토록 하여 국민 신뢰 회복

2 김영란법 적용 대상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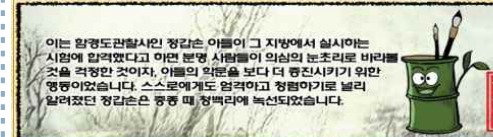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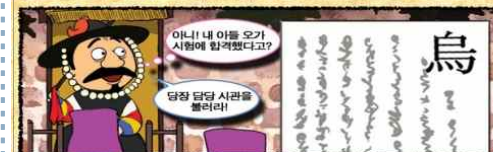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

3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직자들의 배우자, 공무원행사인, 일반국민(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고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청렴만화

향시방목에서 내 아들의 이름을 삭제하라 -정갑순



청렴인물 탐방

◆ 경제대통령 김재익 (1938.11.26 ~ 1983.10.9)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되어, 한국경제의 성장과 안전을 실현함.

청와대에 있는 동안 인사청탁이 끊이지 않았는데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 보낸 지원자라도 돌려보냄.

전두환 대통령의 벼마(지금의 미얀마) 예방 수행중 아웅산 사태로 순직.

